

“3·1운동 가장 큰 성과 임시정부 수립”

문 대통령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국호·태극기·애국가 물려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 그 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내년에 건국 100주년을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계층, 지역, 성별,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한 국민이 됐다”며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란 국가 상징을 물려줬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왔다”면서 “1700만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보았다. 어둠을



한옥마을에 울려 퍼진 “대한민국 만세”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에서 (사)국학원, 전북국학원 주최로 열린 99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시민 등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밝혔던 하나하나의 빛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또 다시 선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문을 열게 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이라며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

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곳곳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의 유적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충청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춘석 의원, 원광중 특교세 9억4800만원 확보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던 원광중학교의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원광중학교의 노후된 외부창호와 냉난방 시설의 교체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 4,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994년 건축된 원광중학교 본관동은 외부창호가 오래되다 보니 훼손과 변형이 심해 단열 및 방음이 부실하고 2003년에 설치된 냉난방 시설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 학생 및 교직원들은 그간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교체사업으로 인해 교실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단열효과로 인한 에너지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교육공간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의원, 병원 ‘태움 방지법’ 대표발의

‘병원 내 괴롭힘 현상으로 알려진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27일 ‘태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을 개정안에는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태움과 같은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으로 간호사들을 포함한 직장인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태움 문화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잘못된 관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라며 “태움 방지법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처리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불관리일원화법, 사립학교법 등은 여야간 이견 탓에 상정 보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

야 한다. 단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트레업 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5·18 특별법 대안은 재석 202명에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5·18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대안은 특조위 ‘입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일부 수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대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의

결했다.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법사위에서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총정수가 확정 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가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참여하게 대립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 명시된 바 없다고 맞섰다. /뉴시스

週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 · 공휴일 민간 도입
5·18 진상규명 특별법 · 새만금사업 특별법 등 의결

이용호 의원 ‘민주평화당 국회 교섭단체 참여 결정’

국민의당을 탈당한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지난날 28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교섭단체 구성서류에 서명날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탈당 후 민주평화당 입당과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 대상이었다.

이날 국회 이용호 의원실(518호)에서 정동영 의원과 이 의원은 상호 합의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서명날인서에 날인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당 탈당 후 무소속을 선언하였지만, 민주평화당 입당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이용호 의원의 결단을 전북의원들과 함께 환영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남의 손금주 의원 역시 합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간국)

후원금 사용내역	01	02	03	04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해외 구호활동
		인연 지식보급	5,733,677,999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